

- 본 자료는 2003년도 통일부 정책연구과제로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에게 용역을 위촉하여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 따라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통일부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권순필





##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3
II. 통치 이념의 변화 : 폭, 내용과 방향 .....	7
1. 김일성 시대의 주체사상 : 체계와 특징 .....	7
2. 김정일 시대의 통치담론 : 붉은기 담론과 강성대국론을 중심으로 .....	11
3. 김정일 시대 통치이념의 지속과 변화 .....	17
III. 북한의 권력체계 변화 : 당·군·정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	22
1. 김일성 시대 당·군·정의 위상과 역할 .....	22
2. 김정일 시대 당·군·정 관계의 변화 .....	29
3. 당·군·정 관계 변화의 정책적 함의 .....	46
IV. 김정일의 권력 승계 전망 .....	50
V. 맺음말 .....	58



## I. 문제의 제기

- 김일성 사후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 이 같은 정치적 안정성은 외부 정보의 철저한 차단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확고한 당·군·정 장악, 당을 통한 끊임없는 사상통제 및 정권안보 차원에서의 군대에 대한 배려 등에 기인하는 것임.
-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이 1990년대 중반 많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북한 조기붕괴론을 신봉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음.<sup>1)</sup>
  -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는 현재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sup>2)</sup>
  - 김정일 시대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중장기적인 대북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김정일 시대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분적 변화를 근본적 변화로 확대해석하려는 ‘본질적 변화론’과 의미 있는 변화조차 무시하려는 ‘불변론’적 시각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또한 변화의 폭과 내용,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 김일성 사후 우리 사회에서는 한 때 주체사상이 붉은기사상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주장이 나왔고, 최근에는 강성대국론 또는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을 대체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이 같은 주장들은 이데올로기(주체사상)와 주요 통치담론들(붉은기담론, 강성대국론, 선군정치론 등)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해들임.

1 유석렬, 『북한의 체제위기와 한반도통일』 (서울: 박영사, 1997), 1쪽 참조.

2 정성강, “남북정상회담 후속대화의 평가,” 『북한연구학회보』, 제4권 제2호 (서울: 북한연구학회, 2000), 78-79쪽 참조.

- 이 같은 주장들의 문제점에 대해 학계에서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에서도 산하 연구·교육 기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김일성 사후 북한의 당(黨)·군(軍) 관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부정확한 해석들이 널리 확산되어 있었음.
- 김일성 사망 직후에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김정일의 권력이 군부에 압도당해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고, 김정일의 당 총비서 취임 이후에는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북한의 당·군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여 김정일이 당보다 군을 더욱 중시한다거나 북한이 ‘군부통치 국가’로 되었다고 주장하였음.<sup>3)</sup>
- 그러나 2000년경부터 국내에서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군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군대의 영향력이 당의 영향력을 압도하고 있다는 주장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음.<sup>4)</sup>
- 대신에 “당·정·군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시스템에 의해 수령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령 개인이 당정군을 직접 직할통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어<sup>5)</sup> 김정일 시대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에 대한 인식상의 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3 강신창, “김정일체제의 선군(先軍)정치와 군사,” 전국대학북한학과협의회 편, 『북한 정치의 이해』 (서울: 을유문화사, 2001), 197-238쪽; 권영기, “[국가정보원장 퇴임 후 최초 인터뷰]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 《북한은 군부통치국가... 지배층에서 투항자 속출》,” 『월간조선』, 1999년 9월호, 98-121쪽; 김성철, “김정일시대의 정책전망: 위기 속의 정치체제 변용과 전망,” 『통일경제』, 1997년 9월, 12-19쪽; 김연철, “군부 중심의 위기관리와 모색의 정치: 권력승계와 모색의 정치,” 『통일한국』, 1997년 7월호, 32-35쪽; 박현옥,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사전략,” 『북한』, 2001년 4월호, 174-182쪽; 이상민,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조선노동당의 위상,” 이상민 외, 『21세기의 남북한 정치 - 새로운 남북관계와 통일한국의 미래 -』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0), 163-188쪽; 한용섭, “북한 권력구조의 동요: 군부와 노동당,” 『계간 사상』, 1997년 가을호, 137-169쪽 참조.

4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 김정일 시대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선군정치’와 당·군 관계,” 『국가전략』, 제7권 3호 (성남: 세종연구소, 2001), 51-77쪽; 최진욱, “북한 선군정치의 정치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제4권 2호(서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한울, 2001), 9-39쪽 참조.

5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6집 2호 (2002 여름), 349-365쪽.

- 따라서 정확한 대북 인식의 확산을 위해 북한의 당(黨)·군(軍)·정(政)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중장기적 대북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김정일 이후’ 권력 승계 문제에 대한 현실성 있는 분석이 필요함.
- 2001년 5월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의 일본 비밀 입국 실패 이후 『조선일보』 등 국내언론에서는 대체로 김정일의 후계자로 김정남이 지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하였음.<sup>6)</sup>
  - 그러나 2003년 초에 김정일의 부인 고영희에 대한 개인송배 문건이 입수·공개됨으로써<sup>7)</sup> 현재 김정남보다 김정일의 차남 김정철 (또는 3남 김정운)이 후계자로 더욱 유력시되고 있음.
- 본문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2002년부터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염두에 둔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비록 우리 사회에 김정남과 김정철 또는 김정운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과거 김정일의 후계자 지명 과정, 북한의 정치문화, 수집 가능한 정보 등을 통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북한 정치체제의 미래에 대해 현실성 있는 전망을 내리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먼저 김정일 시대 통치 이념에 대해 변화의 폭과 내용, 방향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임.
- 그 다음 북한 권력체계의 변화에 대해 당·군·정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할 것임.
  - 마지막으로 김정일의 권력 승계 문제에 대해 과거의 사례와 현재의 진행 상황을 토대로 현실성 있는 전망을 제시할 것임.

6 우종창, “북풍사건의 주인공 윤홍준 주장: 《나는 일본에서 김정남을 만났다》,” 『월간조선』, 2001년 6월호, 194-210쪽 참조.

7 “《존경하는 어머니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충신중의 충신이다》 — 강연자료(2002년 8월) 조선인민군 출판사 (대외비 자료 전문) —” 『월간조선』 2003년 3월호, 120-130쪽.

-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사용하는 용어 및 어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김정일 시대 새로운 정치담론들의 역할을 규명하고, 주요 기관들 간의 역학관계에 대해서도 명료한 설명을 시도할 것임.
  
- 북한의 공식문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사례 및 탈북자들의 증언을 참조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것임.



## II. 통치 이념의 변화: 폭, 내용과 방향

### 1. 김일성 시대의 주체사상: 체계와 특징

- 해방 직후 북한은 스탈린적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그대로 수용하였고, 한국전쟁 이전까지 모든 분야에 소련 고문과 소련 태생의 한인이 입국해 정치를 함으로써 이 시기의 북한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소련의 가맹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음.<sup>8)</sup>
  - 그러나 1953년 스탈린 사망 후 소련의 지도부가 최고지도자 1인으로서의 권력집중과 대립되는 집단지도체제를 복원하고 국제적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자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은 스탈린주의적 노선을 고수하면서 소련 새 지도부의 노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게 됨.
- 북한정치에서 ‘민족의 복권’과 스탈린적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북한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김일성이 1955년 12월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제하의 연설을 하면서부터였음.
  -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강한 어조로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이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소련공산당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나 중국혁명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나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연구하는 것은 다 우리 혁명을 옹기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와 ‘조선의 지리’ 및 ‘조선인민의 풍속’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음.<sup>9)</sup>
  - 김일성의 이 연설에서의 ‘주체’ 확립에 대한 첫 언급이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대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8 황장엽, “경남대 북한대학원 초청 특강에서의 증언” (1999년 4월 17일).

9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당선전선동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 저작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560-561쪽.

- 주체사상은 형성 초기부터 김일성의 사상과 동일시되기는 하였으나, 1974년 이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천 이데올로기’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음.
  - 주체사상이 ‘실천 이데올로기’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사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 그러나 1974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결정되고 난 후 김일성의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선포하면서부터 주체사상은 북한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하는 ‘순수 이데올로기’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사상으로 선전되었음.<sup>10)</sup>
- 필자는 여기서 논의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김일성주의’와 ‘김일성-김정일주의’ 및 ‘김정일주의’ 등의 용어에 대해 북한과는 다른 식으로 정의할 것임.
  - ‘김일성주의’는 김일성의 사상과 동일시된 주체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일성의 사상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사상과 동일시된 주체사상을, ‘김정일주의’는 김정일의 사상과 동일시된 주체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것임.
  - 그리고 ‘김일성주의화’는 주체사상이 북한의 유일사상으로서 김일성의 사상과 동일시되는 것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주체사상이 김일성의 사상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사상과 동일시되는 것을, 그리고 ‘김정일주의화’란 주체사상이 기본적으로 김정일의 사상과 동일시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것임.
- 1982년 김정일이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sup>11)</sup>를 발표한 이후부터 주체사상은 김일성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사상과 동일시되기 시작하였음.

10 ‘순수 이데올로기’와 ‘실천 이데올로기’ 간의 구별에 대해서는 Franz Schurma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3) 참조.

11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주체사상도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364-431쪽.

특히 1985년에 발행된 10권의 주체사상 총서<sup>12)</sup>는 주체사상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저작들임.<sup>13)</sup>

- 주체사상 총서는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지도적 원칙,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론,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이론, 인간 개조이론,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론, 사회주의 문화건설이론, 영도체계, 영도예술로 구성되어 나름대로 정연한 체계를 갖추.

- 이미 1985년에 주체사상 총서에서 김정일의 저작 또는 담화에 대한 인용 회수가 김일성의 저작 또는 담화에 대한 인용 회수를 능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김정일의 실제적 영향력이 김일성의 그것과 비견할 정도로 커진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음.

○ 주체사상은 이론적으로 황장엽의 인간중심철학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역사원리, 그리고 민족주의적 요소와 스탈린적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황장엽에 의해 체계화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원리는 외양상 주체사상의 전면(前面)에 등장하고 있어 일견 주체사상의 핵심적 요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계급적 입장’과 스탈린주의적 수령 절대 독재논리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으며 주체사상의 전 체계에서 장식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음.

12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백산서당, 1989년 재발행);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백산서당, 1989년 재발행);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백산서당, 1988년 재발행); 사회과학출판사 편,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백산서당, 1989년 재발행); 사회과학출판사 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태백, 1989년 재발행); 강운빈 저, 사회과학출판사 편, 『인간개조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조국출판사, 1989년 재발행); 사회과학출판사 편,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태백, 1989년 재발행); 박승택 저, 사회과학출판사 편, 『사회주의 문화건설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조국, 1989년 재발행); 사회과학출판사 편, 『영도체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지평, 1989년 재발행); 사회과학출판사 편, 『영도예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지평, 1989년 재발행).

13 정성장, “주체사상의 기원과 형성 및 발전 과정,”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1집 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0), 315-344쪽 참조.

- 민족주의적 요소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원리보다 중요한 주체사상의 실질적인 구성요소이지만, 그것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계급적 입장’과 스탈린주의적 수령 절대 독재논리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 있음.
  - 그리고 주체사상이 유교적 충효사상과 결합하여 수령에 대한 숭배를 더욱 절대화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황장엽이 ‘수령절대주의 사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처럼 스탈린적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봉건주의’가 주체사상의 핵심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음.<sup>14)</sup>
- 물론 스탈린주의적 ‘개인 권력’(pouvoir personnel)의 논리가 주체사상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스탈린주의와 주체사상 간에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함.
- 스탈린 시대의 소련에서는 수령의 개인 절대 독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이데올로기를 수정하는 방향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였던 것에 반해,<sup>15)</sup> 북한에서는 수령의 절대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령론’이 주체사상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 잡았음.
  - 김정일에 의해 1980년대 중반에 제시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혁명적 수령관’은 모두 수령개인의 절대독재를 이론적으로 더욱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음.
- 지배권력의 무제한적 성격, 정밀과학·철학·언어학·문학·예술 등 인간 활동의 전 분야에서 절대적 권위의 요구, 직책으로부터 오는 정통성 (légitimité de fonction)의 요구로부터 개인적 자질로부터 오는 정통성 (légitimité de personne)의 요구로의 이전 등은 스탈린과 김일성의 권력 체계에 공통되는 현상임.<sup>16)</sup>

14 정성장,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와 성격,”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제2호 (서울: 북한연구학회, 1999), 251-273쪽 참조.

15 레오나드 사피로, 『전체주의 연구』 (서울: 종로서적, 1983), 52쪽.

16 H. Carrère d’Encausse, “L’URSS ou le totalitarisme exemplaire,” in Madeleine Grawitz and Jean Leca (eds.), *Traité de science politique 2* (Paris: P.U.F., 1985), pp.226-229 참조.

- 스탈린주의와 주체사상 간의 차이는 후자가 신유교의 절대주의적 전통과 결합하여 북한에서의 왕조적 권력승계를 합리화하는데 기여하였다는 데서도 드러남.
- 그러나 북한에서 ‘봉건주의’는 최고지도자의 권력승계와 권위의 절대화에 영향을 미쳤을 뿐 정치경제체계의 기본적 운영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2. 김정일 시대의 통치담론: 붉은기 담론과 강성대국론을 중심으로

○ ‘담론’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담화나 논의를 뜻함.

- 일상생활에서 ‘정치담론’은 정치가의 공식적인 담화, 즉 연설이나 논설에서 나타나는 논의 또는 정치영역에서 전개되는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음.
- 정치담론 또는 통치담론은 레토릭의 차원을 넘어서 특정 정치체제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고 권력 및 자원의 분배 양식을 정당화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매개역할을 담당함.
- 정치권력은 특정 담론을 생산하고 유지하며, 이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확고히 함.
- 이러한 맥락에서 통치담론은 이데올로기를 구체적으로 현존하게 하는 매개체이며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지님.
- 사회경제적 토대나 국제질서 또는 국내정치의 변동에 따라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 규범을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거나 새롭게 부상되는 이슈를 기존의 이데올로기 내에 흡수할 필요가 있을 때 정치권력은 새로운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이 때 필요할 경우 이데올로기적 동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이데올로기 체계가 재구성됨.<sup>17)</sup>

17 김경희, “김정일 시대 주체사상의 지속과 변화” (이대 북한학 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2003), 11-15쪽 참조.

- 1990년대 초에만 해도 조선로동당 지도부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것으로 동구 사회주의체제 붕괴와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 및 구소련 해체의 충격을 극복하려 하였음.
  - 우리식 사회주의론은 탈냉전과 함께 북한의 대외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냉전시대에 형성되고 체계화된 기존의 주체사상만으로 변화된 환경에의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짐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주체사상의 보조담론, 통치담론이었음.
  - 그런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거의 50년간 북한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이 사망하고, 경제난이 극도로 악화되는 등 대내적 상황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음.
  - 특히 1995년, 1996년 두 해에 걸쳐 발생한 흉수와 1997년의 가뭄으로 북한에서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으로 추산되는 인구가 아사하였고,<sup>18)</sup> 인민들의 상당수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북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sup>19)</sup>
  - 따라서 조선로동당 지도부는 우리식 사회주의론으로 당면하고 있던 위기를 돌파하는데 한계를 느꼈던 것으로 보임.
  - 인민대중에게 자신감이 아닌 ‘버림과 인내의 집단적 의지’를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게 된 것임.<sup>20)</sup>
- 바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론과는 다른 새로운 주체사상의 하위 담론, 통치담론이 요구되었고, 이런 필요에 대응하여 ‘붉은기’ 담론이 나오게 되었음.
  - ‘붉은기’ 담론은 곧 ‘붉은기철학’과 ‘붉은기사상’에 대한 담론으로 발전하게 되었음.

18 황장엽,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서울: 월간조선사, 2001), 106-107쪽 참조.

19 김정일,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 - 1996년 12월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의 연설문 -,”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308-311쪽 참조.

20 김근식, “북한 발전전략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195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9), 230쪽 참조.

- 북한에서 ‘붉은기’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상징하는 기발”<sup>21)</sup>로 이해되어 왔음.
  - 그리고 “붉은기는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리상과 희망의 표대”<sup>22)</sup>라고 『로동신문』이 지적하고 있듯이 ‘붉은기’와 공산주의운동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왔음.
  - 그런데 김일성 사후 북한에서 ‘붉은기’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으며 강조되었음.
  - 북한이 ‘붉은기’의 상징성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8월 28일자 『로동신문』에 “붉은기를 높이 들자” 제하의 정론을 실으면서 부터였음.
  - 이 정론에 따르면 김정일이 “우리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비겁한 자들은 혁명의 기발을 버리고 가지만 우리는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키리라고 결심하였다”고 엄숙히 말했다고 함.<sup>23)</sup>
  - ‘붉은기’에 대한 김정일의 이 같은 언급은 후에 ‘붉은기사상’ 담론이 대두하게 되는 주요 배경이 되었음.
- 붉은기사상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인 설명은 『철학연구』 1997년 제1호에 실린 김덕유의 논문에서 발견할 수 있음.
  - 이 논문은 먼저 “붉은기의 혁명적 의미와 내용이 체계화되고 승화되어 반영된 것이 붉은기사상”이라고 지적하였음.
  - 그리고 주체사상과 붉은기사상 간의 관계에 대해 “붉은기사상에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 원칙이 투철하게 구현”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음.
  - 김덕유는 또한 붉은기사상이 김일성의 사상, 조선로동당의 혁명사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오늘 우리 당의 붉은기사상은 곧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이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붉은기사상을 오늘의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빛나게

21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문화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458쪽.

22 리중태·동태관, “붉은기를 높이 들자,” 『로동신문』, 1995년 8월 28일 정론.

23 위의 글 참조.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sup>24)</sup>고 말하였음.

- 붉은기사상에 대한 북한의 이 같은 설명은 — 비록 이 시기에 붉은기사상이 정연한 논리체계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 김정일 시대에 주체사상이 붉은기사상에 의해 대체되어 가고 있다는 관측이 외부에서 대두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음.<sup>25)</sup>

○ 북한당국이 힘주어 강조하였던 김정일의 붉은기사상에 대한 언급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시점은 대략 1998년 4월경임.

- 한국이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IMF의 관리체제하에 들어가고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함으로써 북한을 흡수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임.

- ‘붉은기사상’ 담론은 1998년 하반기에 미래에 대해 보다 낙관적인 담론인 ‘강성대국론’에 의해 대체되는 운명을 맞이하였음.

- 그러나 ‘붉은기’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1990년대 중반보다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언급되고 있음.<sup>26)</sup>

- 그것은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가 단기간 내에 해소될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위기극복을 위해 당과 군과 인민이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수령을 결사옹위할 것을 강조하는 붉은기 담론의 유용성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임.

○ 현재 북한의 중요한 정치담론 중의 하나인 강성대국론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98년 8월 22일자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서였음.

- 동 정론은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에 대해 “착취와 억압, 가난과 무지, 침략과 약탈, 지배와 예속으로 얼룩진 지난 시대의 반동적, 반인륜적 국가건설사에 종지부를 찍고 인민의 자주적 요구, 인류의 념원을 전면적

24 김덕유, “붉은기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강행군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철학연구』, 1997년 제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15쪽.

25 『중앙일보』, 1997년 2월 14일; 『세계일보』, 1997년 2월 15일 참조.

26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로동신문』, 2003년 1월 1일 참조.



으로 꽃피워주는 영원한 이상국”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리고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대국가수반 앞에, 조국과 민족 앞에 다지신 애국충정맹약이며 조선을 이끌어 21세기를 찬란히 빛내이려는 담대한 설계도”라고 설명하였음.

- 로동신문 정론은 북한이 ‘수령중심의 강성대국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걸출한 수령, 위대한 애국자, 강철의 영장을 영원한 국가수반으로 모시는 것은 “사회주의 자주강국 건설의 생명이며 최고원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음.

북한의 이 같은 언급을 통해 주체사상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혁명적 수령관’이 강성대국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강성대국 건설과 관련하여 동 정론은 ‘사상과 군대’를 틀어쥐면 근본을 틀어쥔 것으로 된다고 지적하고,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주체적인 강성대국 건설방식이다”라고 설명하였음.

이 같은 설명은 당의 영도적 역할과 군대의 모델적 역할을 강조하는 선군 정치의 논리가 강성대국론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로동신문 정론은 또한 북한이 이미 ‘사상의 제일강국,’ ‘정치대국,’ ‘군사강국’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음.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가 좋은 사회주의제도와 전투력 있는 당, 충실하고 근면한 인민을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경제문제를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구에 경제강국의 높이에 오르는 것은 확정적이다”라고 매우 희망적이지만 대부분의 외부 연구자들에게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이는 전망을 제시하였음.<sup>27)</sup>

○ 북한은 1998년 9월 9일 공화국 창건 50주년을 기념하는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음.

- 이 때 나온 주장들은 동년 8월 22일 정론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재확인하는

---

27 최칠남·동태관·전성호,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9년 8월 22일 정론 참조.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정권 수립과 관련하여 새롭게 강조된 것들도 있었음.

- 9월 9일자 사설은 김정일의 사상과 정치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것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정권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정치를 빛나게 실현하는 강력한 무기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그리고 이를 위해 정권기관 안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집행하며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 규율과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이는 정권기관에 대한 당적 영도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임.<sup>28)</sup>

○ 강성대국 건설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1999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또 다시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하게 됨.

- 신년공동사설은 북한을 사회주의 사상강국으로 더욱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주체의 나라”라고 지적하였음.
- 사설은 또한 전체 북한인민이 당의 사상의지대로만 숨쉬고 싸워나가는 “위대한 김정일사상의 절대적인 숭배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북한이 전례 없이 ‘김정일사상’을 강조한 것은 주체사상의 김정일주의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목임.<sup>29)</sup>

○ 이처럼 1998년 8월 22일자 정론, 동년 9월 9일자 사설 그리고 1999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의 기본 방향이 제시되었고, 1999년 1월 1일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sup>30)</sup>를 통해

28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자,” 『로동신문』, 1998년 9월 9일 사설.

29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로동신문』, 1999년 1월 1일.

30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주체88(1999)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452-464쪽.

강성대국 건설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천명함으로써 강성대국론은 김정일 시대에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주체사상이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보조적 담론, 통치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

- 강성대국 건설에 대한 북한의 구상은 2000년에 『김정일강성대국 건설 전략』과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사상』이라는 두 권의 책이 발간됨으로써 더욱 체계적으로 제시되었음.

### 3. 김정일 시대 통치이념의 지속과 변화

○ 1974년부터 김일성주의화하고 1982년부터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한 주체사상이 김일성 사후 김정일주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1985년에 발행된 10권의 주체사상 총서가 주체사상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저작들이라면, 김일성 사후 1996년부터 발행되고 있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시리즈는 주체사상의 김정일주의화를 보여주는 저작들이라고 할 수 있음.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은 경제학, 법학, 철학, 문예학, 언어학 등 여러 학문 분야별로 집필되어 이미 15권 이상 발간되어 있음.<sup>31)</sup> 흥미 있는 사실은 1985년에 발간된 주체사상 총서에서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 등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용어들을 제목에 넣어 혁명주의적 경향들을 강조하였지만, 1996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총서에서는 최소한 제목에서는 혁명주의적 경향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임.
- 물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총서에서 김일성 시대의 주체사상과 달라진 내용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김정일의 사상을 서구의 학문 구분에 맞추어 포장한 사실은 탈냉전의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3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경제학 1-4』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문예학 1-5』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1998);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법학 1-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1998);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언어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철학 1-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참조.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유훈통치 기간 동안 김정일이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고 지적한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998년 이전까지만 해도 김정일주의에서 김일성주의와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음.

- 그러나 1998년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에 재추대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음.

- 1997년 12월 12일자 정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선군정치론(先軍政治論),<sup>32)</sup> 1998년 8월 22일자 정론을 통해 처음으로 제시된 강성대국론, 1999년 1월 16일자 『로동신문』 사설 등에서 제시된 과학중시사상<sup>33)</sup> 등은 김정일 시대 주체사상이 김일성 시대와는 다른 내용을 갖게 하는 담론들임.

- 이 같은 주체사상의 하위 담론들은 북한의 지도부가 주체사상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고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당과 국가기구, 군대와 인민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물론 이 담론들은 주체사상의 기존 논리와 항상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며, 기존 논리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재확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선군정치의 논리는 특히 주체사상의 전 체계에서 사회역사원리의 일부분을 수정하고 있음.

- 북한에서 1985년에 출간된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에는 “수령이 노동자, 농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과 계층을 조직적으로 결속하여 혁명의 보조역량을 꾸림으로써 강력한 주체적 혁명역량을 마련하고

32 최용택·김정웅, “우리는 백배로 강해졌다,” 『로동신문』, 1997년 12월 12일 정론.

33 “과학중시사상을 구현하여 강성대국의 앞길을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1999년 1월 16일 사설; “과학중시사상을 틀어 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론설),” 『로동신문』, 2000년 7월 4일.

끊임없이 강화한다”고 적혀있음.<sup>34)</sup>

사회역사원리(주체사관)에 따르면 노동자와 농민이 혁명의 주력군이 되는 것임.

- 그러나 김정일 시대에 북한은 선군정치를 실시하면서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분명 김일성 사망 이전까지 노동자와 농민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보던 선로후군(先勞後軍)의 관점에서 벗어난 것임.
- 그런데 북한은 새로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간주된 군대가 ‘혁명의 참모부’인 당과 ‘혁명의 최고영도자’인 수령의 영도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영도를 정당화하는 주체사관의 기존 논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sup>35)</sup>
- 북한은 또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인민군대 안에 당의 령군 체계가 더욱 확고히 수립되고 그를 본보기로 하여 온 사회에 대한 당의 령도체계 확립에서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sup>36)</sup> 이는 선군정치로 인해 주체사상의 전 체계 중 영도체계와 관련하여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임.
- 1985년에 북한에서 발간된 『령도체계』에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관련하여 군대의 역할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음.<sup>37)</sup>
- 그러나 선군정치로 인해 군대의 모델적 역할이 전례 없이 강조됨에 따라 영도체계의 부분적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음.

○ 2001년 부시 행정부의 출범 이후 북한의 안보위기의식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북한은 선군정치에 더욱 집착하고 선군정치를 ‘만능의 보검’으로까지 내세우게 되었음.

- 이 같은 현상을 확대해석하여 일부 연구자와 언론은 김정일 시대에

34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193-194쪽.

35 정성장, “김정일의 ‘선군정치’: 논리와 정책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제4권 2호 (서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한울, 2001), 81-114쪽 참조.

36 김병진, “당의 령도체계확립에서 전환을 가져 온 위대한 선군령도,” 『로동신문』, 2003년 5월 7일.

37 『령도체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참조.

통치이념이 주체사상에서 선군사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였음.<sup>38)</sup>

- 그러나 바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군정치 담론이 주체사상의 기존 이론체계에 부분적 수정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지도적 원칙,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론,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이론, 인간개조이론,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론, 사회주의 문화건설이론, 영도체계, 영도예술 등으로 구성된 주체사상을 대체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임.

○ 또한 김정일 시대에 강성대국론이 주체사상을 대체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음.

- 이 같은 논지를 제기한 연구자는 김일성 사후 북한 지도부가 주체사상을 퇴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체사상이 동원되는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새로운 개념의 정치구호 및 이념체계가 형성되어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동 연구자는 또한 붉은기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 등이 그 대안적인 것들이며, 특히 “강성대국은 이제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동 연구자는 이어서 ‘주체사상 퇴조의 배경’으로 김일성이 사망하고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정치구호’를 모색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음.<sup>39)</sup>

-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은 주체사상을 ‘정치구호’와 동일시함으로써 논의를 매우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문제점이 있음.

- 주체사상은 스탈린적 맑스-레닌주의를 북한의 현실에 맞게, 그리고 김일성·김정일의 개인 절대 독재에 적합하게 수정한 것으로 나름대로의 인간관과 세계관, 역사관, 혁명이론, 영도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주체사상을 단순한 정치구호와 동일시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38 『중앙일보』, 2003년 4월 4일; “지배이념 바뀌는 북한 사회,” 『연합뉴스』, 2003년 4월 8일.

39 서재진, “김정일시대 통치이념의 변화: 주체사상에서 강성대국론으로,” 『북한체제의 현주소』, 학술회의 총서 02-02 (서울: 통일연구원, 2002), 15쪽.

판단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음.

- 일부 연구자는 강성대국론이 김정일 시대에 주체사상을 대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강성대국론에 대한 북한의 문헌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주체사상의 순결성 고수를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강성대국론은 주체사상과 모순 되는 것이 아니며, 김정일 시대 북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청사진’으로서 오히려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주체사상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보조적 통치담론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Ⅲ. 북한의 권력체계 변화: 당·군·정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 1. 김일성 시대 당·군·정의 위상과 역할

- 김일성 시대 당·군·정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독제의 의미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임.
  - 1972년 북한 헌법의 제10조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독제를 실시”<sup>40)</sup>한다고 명문화하였음.
- 북한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가 프롤레타리아독제체계를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프롤레타리아독제체계는 수령을 중심으로 노동계급의 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들로 구성됨.
  - 프롤레타리아독제체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당이며, 당은 주권을 잡기 전이나 잡은 다음이나 할 것 없이 혁명투쟁에서 일관되게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정치적 영도기관’으로 간주됨.
  - ‘향도적 역량’으로서 당은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다른 모든 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최고형태의 조직”이며, “혁명과 건설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모든 사업을 조직지휘하는 혁명의 참모부”임.
  - 북한은 “노동계급의 수령은 무엇보다도 당의 수령으로 되며 당의 영도는 다름 아닌 수령의 영도로 된다”<sup>41)</sup>고 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의 총비서직이 수령에게 가장 핵심적인 직책을 분명히 하고 있음.

40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72년 12월 27일),” 『김일성 저작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371쪽.

41 사회과학출판사 편, 『영도체계』, 112쪽.



- 북한에서 ‘국가정권’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 “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설명 등에 잘 나타나 있듯이 당의 영도 하에 있으며, 당이 결정한 정책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
  - ‘국가정권’의 역할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적대분자들에 대한 진압의 기능,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적 기능, 경제조직자적 및 문화교양자적 기능, 방위적 기능 등을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집행”하는 것임.
  - 국가정권은 또한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회안전기관, 재판검찰기관 등 권력기관들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당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며 사법정책, 경제정책, 교육정책, 문예정책, 대외정책 등을 비롯한 당의 모든 정책집행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감독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함.
  - 영도체계에 대한 북한의 이론은 또한 국가정권이 “당의 노선과 정책 집행을 보장하는 힘 있는 수단인 법을 가지고 있으며 법적 공간을 이용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 규율과 질서를 세우고 사람들을 교양함으로써 당의 노선과 정책을 책임적으로 집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당이 헌법을 비롯하여 모든 법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음.<sup>42)</sup>
  - 1980년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의 제23조도 당중앙위원회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 수행을 조직 지도하며” “행정 및 경제 사업을 지도 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sup>43)</sup> 북한에서 주요 노선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당중앙위원회이며 국가정권은 이를 집행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42 위의 책, 147-148쪽.

43 “북한의 조선로동당 규약,” 『북한총람 (1993-2002)』 (서울: 북한연구소, 2003), 1125쪽 참조.

- 국가정권에 대한 북한의 설명에서 흥미 있는 점은 군대와 관련된 부분이 다소 모호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임.
  - 국가정권의 기능으로 “적대분자들에 대한 진압의 기능,” “방위적 기능”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군사 분야에서도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집행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국가정권에 속하는 권력 기관들의 범주에 군대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이는 군대가 국가정권의 군대이기 이전에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이며, 당과 수령이 군대를 직접 장악하고 있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조선로동당 규약은 한 장(제7장)을 전적으로 “조선인민군대내 당조직”에 할애하여 군대에 대한 직접 통제 및 장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당 규약 제46조는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선인민군이 당의 군대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또한 제47조에서는 “조선인민군대 내의 각급 단위에 당조직을 구성하며 조선인민군의 전체 당조직을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직속하며 그 지도 밑에 사업하고 자기 사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sup>44)</sup>
  - 이처럼 조선인민군의 각급 단위에 대한 당의 통제를 제도화시켜 놓고 있어 군대가 당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당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 당 규약 제23조는 당중앙위원회가 “혁명적 무력을 조직”하고 그들의 전투능력을 높인다고 규정함으로써 당중앙위원회가 군대를 조직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44 위의 글, 1129쪽.

- 당 규약 제27조는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당중앙군사위원회)가 “당군사정책 대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군대가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의 지휘 하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음.<sup>45)</sup>
  - 당 규약 제51조는 또한 당중앙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정치, 경제 및 군사분야의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들을 조직하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소속정치기관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당정치 사업을 조직하고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당 규약 제52조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중앙기관 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은 당중앙위원회 직속이며 그 지도 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담당사업에 관해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총정치국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직접적 통제를 보장하고 있음.<sup>46)</sup>
- 그런데 조선로동당 내 다양한 조직들의 특성과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설조직체계와 ‘비상설 집단지도 및 협의체계’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필요함.
- 비상설 집단지도 및 협의체계는 당 규약상 각 수준에서 외형적으로는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1980년대부터 김정일의 영향력 증대와 함께 당 규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당의 상설조직체계가 당의 실질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중추기관이 되어 왔음.
  -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안에 조직되어 있는 정치국,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선인민군 당위원회 등이 비상설 집단지도 및 협의체계에 해당함.
  - 당의 상설조직체계로는 중앙의 경우 당중앙위원회 비서국과 그 산하의 각 전문부서들(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국제부 등)이 있고, 지방 및 하급 당조직들의 경우 해당 당위원회의 비서처와 그 산하의 전문부서들이 있음.

---

45 위의 글, 1125쪽.

46 위의 글, 1129-1130쪽.

- 당의 상설조직체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 비서국 산하의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인데, 전자가 당 조직생활에 대한 지도기능을 수행한다면 후자는 당 사상생활에 대한 지도기능을 수행함.<sup>47)</sup>
  - 당의 군대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도 비상설 협의기구인 조선인민군 당 위원회보다 상설기구인 군 총정치국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조선로동당 규약이 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 내용 및 영도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의 1972년 헌법은 군대에 대한 국가정권의 지도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음.
- 헌법의 제94조는 주석이 “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헌법 제103조는 “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가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 사업을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 제109조는 또한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이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sup>48)</sup>
  - 헌법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공화국의 주석만이 군대를 지휘 통솔할 뿐이고 어느 기관도 군대를 조직하거나 지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함. 중앙인민위원회의 국방사업 지도와 정무원의 인민무력건설 사업 모두 국방력 강화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며, 두 기관 모두 군 조직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관련해서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의 당·군·정 관계에 대해 논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 하나는 ‘정부’에 대해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임.

47 현성일, “북한노동당의 조직구조와 사회통제체계에 관한 연구 —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중심으로 —” (한국외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24-35쪽.

48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72년 12월 27일),” 383-386쪽.

- 1972년 헌법을 기준으로 할 때 ‘정무원’만을 정부로 보는 시각이 많으나, 북한의 문헌은 ‘정부’에 대해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과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을 통털어 이르는 말. 공화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수위로 하는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으로 구성된다”<sup>49)</sup>고 설명하고 있어 중앙인민위원회도 포함하고 있음.
- 1972년에 김일성은 초헌법적 조직인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서 당을 통해 군대를 확실하게 장악하는 한편, 공화국의 주석으로서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하였고, 중앙인민위원회의 수위로서 국방사업을 지도하였음.
- 그런데 1972년의 헌법에서 국방위원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사업을 돕는 한 부분 위원회의 위상 밖에 가지지 못하였고(제105조), 국방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부재하였음.
- 그리고 정무원이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제109조)되어 있어 군대에 대해 제한적으로나마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sup>50)</sup>
- 그런데 이 같은 당·군·정 관계는 1990년대에 이르러 ‘수령의 후계자’ 김정일이 국가기구에서도 핵심적 직책에 선출됨으로써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음.
- 동유럽에서의 민주화 급진전 및 동구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 베를린 장벽의 붕괴, 북한의 주요 동맹국들의 남한과의 관계정상화 등 대외환경의 급격한 악화는 김일성으로 하여금 기존의 당·군·정 관계를 변화시키면서 김정일로의 국가권력 이양을 서두르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1990년 5월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에서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에 있던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격의 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자신이 위원장에 취임하였고 김정일을 제1부위원장으로 임명하였음.

49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98쪽.

50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72년 12월 27일),” 383-386쪽.

- 이처럼 국방위원회의 지위를 격상시킨 것은 김일성 생시에 김정일에게 군 지휘권을 먼저 이양하려는 조치로써, 1991년 12월에는 1972년에 제정된 헌법상의 조항을 무시하고 국가주석이 겸임하게 되어있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김정일을 추대하였음.<sup>51)</sup>
- 그리고 199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 회의에서의 헌법 개정을 통하여 북한은 1972년 헌법에서 국가주석에게 부여되었던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라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도록 규정하였음(제113조).
- 또한 1992년 헌법에서 새로이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규정된 국방위원회를 공화국 주석에 관한 절(제2절)의 바로 다음에 그리고 중앙인민위원회에 관한 절(제4절)에 앞서 모두 6개 조항으로 구성된 독립된 절(제3절)로 자리 잡게 하는 한편 국방위원회 위원장도 최고인민회의에서 별도의 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였음(제91조).<sup>52)</sup>
- 이는 국가주석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권한에서 군 지휘권만을 분리한 것을 의미함.
- 또한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국방 사업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고, 정부원이 가지고 있던 임무와 권한 중에서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사업”을 없앴으로써 국가기구 내에서 정부가 군대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고 정·군 분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음.
- 이 같은 헌법개정은 김정일 후계체제의 강화를 염두에 둔 조치로서 1993년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김정일이 “군사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격상된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에 추대됨으로써 그는 김일성 생시에 군 지휘권을 먼저 이양 받게 되었음.

51 정성장, “김정일체제의 지도이념과 성격 연구: ‘붉은기사상’과 북한체제의 변용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39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9), 320쪽.

52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 1972년 12월 27일,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수정 1992년 4월 9일),” 『김일성저작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488-496쪽.

- 1992년 헌법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변화는 제1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함으로써<sup>53)</sup> 1972년 헌법에 비해 당의 국가기관에 대한 영도를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임.
-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가 보다 분명하게 재확인되었고, 정부(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에서 국방위원회가 떨어져 나가면서 정·군 분리가 제도화되었음.
- 그리고 1992년 헌법에서 국방위원회에 관한 절이 공화국 주석에 관한 절(제2절)의 바로 다음에, 그리고 중앙인민위원회에 관한 절(제4절)의 앞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상대적 우위가 확립되었음.

## 2. 김정일 시대 당·군·정 관계의 변화

- 김일성 사후 북한에서는 군대의 역할이 전례 없이 강조되고 김정일의 공식행사 중 상당부분이 군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부세계의 주목을 끄는 현상들이 나타났음.
- 1994년만 해도 김정일의 군 관련 활동은 전체 공식 활동의 4.7%에 불과하였는데, 1995년에는 공식 활동의 절반 이상(57%)을 차지하는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음.
- 1996년 들어 김정일의 군부대 시찰 및 군 관련행사 참석은 더욱 크게 증가하여 총 50회의 대외적인 공식 활동 중 37회(74%)에 달하게 되었음.
- 1996년 이후에도 김정일의 군 관련 활동은 그의 공식 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음.

---

<sup>53</sup> 위의 글, 476쪽.

〈 표 1 〉 1994년 이후 김정일 공식 활동 중 군 관련 행사

시 기 \ 분 류	총 횟 수	군 관련 행사수	군 관련 행사수/총횟수(%)
1994	21	1	4.7
1995	35	20	57
1996	52	35	74
1997	59	40	67
1998	70	49	70
1999	69	41	59
2000	73	21	29
2001	83	39	47
2002	98	37	38

출처: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 김정일 시대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75쪽; 「연합뉴스」, 2001년 12월 31일; 2002년 12월 28일.

- <표 1>을 통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김정일의 군 관련 활동이 전체 공개 활동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같은 현상을 가지고 국내에서는 “김정일이 이처럼 군부대 시찰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는 달리 실제로 군부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김정일은 군부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 군부대 시찰을 강화하고 있는 것”<sup>54)</sup>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음.
- 공식행사에서의 주석단의 구성 변화와 1998년 9월 주석제 폐지 및 국방위원장의 권한 강화도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이제 군이 당에 예속된 군대라기보다는 북한체제를 작동하는 권력의 중핵집단으로 떠오른 것”<sup>55)</sup>이라는 판단을 갖게 하는데 일조하였음.
  - 1960년대부터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이전 기간 동안 주석단 배치를 보면, 당정치국 위원 → 당정치국 후보위원 → 당중앙위 비서 → 부총리 → (당중앙위 부장 - 정부원 위원장 및 부장) → 각 정당 및 국가기관 책임일꾼의 순서였음.

54 『연합연감 1998』 (서울: 연합통신, 1998), 657쪽.

55 이상민,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조선노동당의 위상,” 183쪽.



- 그러나 1994년 9월 9일 공화국 창건기념행사 때부터 조선인민군 차수라는 별도의 집단이 배치되기 시작하였고, 1998년 9월 5일의 헌법 개정 후 주석단 상위순서는 대체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 총리 → 인민군 원수 → 당정치국 위원 겸 비서 → 국방위원 → 당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되었음.
- 이 같은 순서를 언뜻 보면 당정치국 위원 겸 비서 - 당정치국 후보위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직책으로서 당직에 의한 배치원칙이 깨진 듯한 인상을 줌.
- 그러나 이 같은 변화를 보다 세밀하고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주석단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 총리 - 조선인민군 원수가 당정치국 정위원 자리에 배치된 것에 주목해야 함.
- 이 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종욱·박성철·김영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당비서는 정치국 정위원임.
-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홍성남 총리, 리을설 원수, 국방위원은 정치국 정위원은 아니지만 과거의 기준에 따르면 정위원급에 해당함.
- 따라서 이들을 정치국 정위원급으로 설정하면, 주석단은 당정치국 정위원 → 당정치국 후보위원 → 당비서 → 차수 → 부총리 → 국가기관 및 정당 대표의 순서로 과거의 주석단 배치 원칙과 큰 차이가 없음.
- 정치국 정위원급에 자리한 국가직 순서도 개정된 헌법의 서열에 근거하고 있음.<sup>56)</sup>
- 따라서 자세히 검토해 보면, 김일성 사후 주요행사에서의 주석단 서열이 국내언론에서 자주 과장되게 소개되는 것처럼 현저하게 변화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56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 김정일 시대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108-114쪽.

- 국내 주요 언론이나 일부 연구자들이 세심한 주의 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석단 서열이 곧 ‘권력서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경우 김정일이 수령의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부터 김일성이 사망할 때까지는 예외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2인자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임.
  - 따라서 의전상의 예우를 위한 서열은 있을 수 있지만 권력서열이란 있을 수 없음.
  - 물론 주석단 서열은 주요 인사들의 직위와 경력 및 배치상의 관행 등 다양한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이 아니라 영향력 또는 상징적 권위의 정도를 측정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있을 것임.
- 주석단 서열이 북한 인사들의 실제적인 영향력과 결코 정비례 관계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주석단 서열을 ‘권력서열’과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절함.
  - 예를 들어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 이후 주석단 서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전문가들에 의해 실제적인 영향력이 거의 없는 ‘얼굴마담’으로 간주되고 있음.
  - 그리고 북한에서 실질적인 2인자로 간주되는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장성택의 경우에는 주석단 서열의 20위내에도 들어가 있지 않음. (<표 2> 참조)
  - 따라서 주석단 서열 30위 이내에 군 인물들이 절반 정도 포진하고 있다고 해서 북한이 ‘군정체제’ 또는 ‘군 우위의 체제’<sup>57)</sup>가 된 것은 아니며, 이는 김정일이 군대의 당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sup>58)</sup>

57 “군부 비중 높은 북한체제,” 『동아일보』, 1999년 10월 18일 사설.

58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258쪽.

〈표 2〉 주식단 서열 비교

서열	김일성 장의 위원회 (1994.7.8)	정권수립 50주년기념 열병식 (1998.9.9)	노동당 창건 55돌 경축 열병식 (2000.10.10)	조선인민군 창건70돌 기념 열병식 (2002.4.25)	정권수립 50주년 기념 열병식 (2003.9.9)
1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2	오진우(사망)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3	강성산	이종옥(사망)	박성철	조명록	조명록
4	이종옥(사망)	박성철	김영주	박성철	박성철
5	박성철	김영주	홍성남	김영주	김영주
6	김영주	전문섭	김영춘	홍성남	박봉주
7	김병식(사망)	조명록	김일철	김영춘	김영춘
8	김영남	김영춘	이을설	김일철	김일철
9	최광(사망)	김일철	백학림	이을설	연형묵
10	계응태	이을설	연형묵	전병호	리용무
11	전병호	홍성남	한성룡	연형묵	전병호
12	한성룡	전병호	계응태	한성룡	한성룡
13	서윤석	연형묵	김철만	계응태	계응태
14	김철만	리용무	최태복	김철만	김철만
15	최태복	계응태	양형섭	최태복	최태복
16	최영림	한성룡	최영림	양형섭	양형섭
17	홍성남	양형섭	김국태	최영림	김국태
18	강희원(사망)	최태복	김중린	김국태	정하철
19	양형섭	김철만	김용순	정하철	김중린
20	홍석형	최영림	리용무	김중린	장성우
21	연형묵	김국태	김익현	김기남	
22	이선실	김기남	조창덕	김용순	
23	김철수	김용순	곽범기	리용무	
24	김기남	김중린	김윤혁	김익현	
25	김국태	홍석형	이하일	이하일	
26	황장엽(망명)	백학림	전재선	조창덕	
27	김중린	김익현	박기서	곽범기	
28	서관희(처형)	전재선	이종산	김윤혁	
29	김용순	박기서	김용연	전재선	
30	김환	이종산	김영대	장성우	
31		김용연	유미영	박기서	
32		이하일		이종산	
33		조창덕		김룡연	
34		곽범기		김영대	
35		김윤혁		유미영	
36		김영대			
37		유미영			

출처: 김영재, “김정일 지도체제와 권력구조,”

[http://www.unikorea.go.kr/kr/northkorea/northkorea\\_understand.php](http://www.unikorea.go.kr/kr/northkorea/northkorea_understand.php)

(검색일: 2003년 9월 5일); 「연합뉴스」, 2003년 9월 9일.

- 북한에서 ‘군중시정치’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1980년대 말부터 당면했던 대내외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1980년대 말 이후 동구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 동서독의 통일과 구소련의 해체 등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안보 위기의식을 심화시켰음.
  - 그리고 미국이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1990년대 초반 핵개발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은 북한의 체제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또한 구소련의 해체로 인한 러시아로부터의 원조 중단과 중국으로부터의 지원 감소는 북한의 대외무역을 상당한 정도로 위축시켰고, 그 결과 북한경제는 199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게 되었음.<sup>59)</sup>
  - 특히 1995년, 1996년 두 해에 걸쳐 발생한 흉수와 1997년의 가뭄으로 경제난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최대의 식량난과 아사자 발생에 직면하게 되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이 일반 인민들의 ‘자발적’ 지지를 기반으로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물리력에 대한 의존도는 대외환경과 경제상황이 악화될수록 커질 수밖에 없었음.
  - 김정일 정권의 ‘군중시정치’ 또는 ‘선군정치’는 북한에 대한 외부의 압력을 견뎌내고, 대외적 긴장조성을 통해 외부세계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아내며, 체제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59 Cheong, Seong Chang. *Idéologie et système en Corée du Nord* (Paris: L'Harmattan, 1997), p.338; 『북한문제 이해 1999』 (서울: 통일교육원, 1998), 154쪽.

- 군중시의 정치는 김정일의 국가관리방식에도 반영이 되는데, 김정일은 1996년 12월 김일성대학 창립을 기념하여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음.

“천리마제강 연합기업소쪽으로 가면서 보니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길가에 쭉 늘어섰습니다. 다른 지방에 가보아도 어디에나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로 차 넘치고 있으며, 역전과 열차 칸에는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로 혼잡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 지금처럼 정세가 복잡한 때에 내가 경제실무까지 맡아보면서 걸린 문제들을 다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혼자서 당과 군대를 비롯한 중요부문을 틀어쥐어야지 경제실무 사업까지 맡아보면 혁명과 건설에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는 군대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자주 인민군 군부대를 현지지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사업은 다른 일꾼들과 행정경제일꾼들이 책임지고 하여야 합니다. ... 지금 인민군대에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아마 우리에게 군량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 미제국주의자들이 당장 쳐들어올 것입니다.”<sup>60)</sup>

- 체제수호의 최후 보루인 군대에조차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다수의 인민들이 식량을 구하러 전국을 유랑하게 된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김정일은 당과 군을 중심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정부는 ‘행정경제일꾼들’이 책임지고 지도하게 하였음.

- 김정일은 1996년 12월의 연설에서 “지금 군대에서는 당정치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지만 사회의 당정치 사업은 맥이 없습니다”<sup>61)</sup>라고 지적하였고,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이 일을 책임적으로 잘하지 못하면 중앙당이 「노인당」, 「송장당」이 될 수 있습니다”<sup>62)</sup>라고 경고하였음.

- 그런데 김정일의 이 같은 언급을 근거로 국내에서는 “현재의 북한에서는 군부에 대한 ‘당적 지도’라는 가정이 상당 부분 잘못된 신화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조선로동당이 관료적 기제를 통해 인민군을 지도하거나 통제하고 있다는 가정은 잘못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sup>63)</sup>거나 “김정일 자신도 당은 이미 노령화, 노쇠화 되었으며, 믿을 것은 군밖에 없다고 군을 한껏 치켜세웠다”<sup>64)</sup>는 주장들이 나왔음.

60 김정일,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 - 1996년 12월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의 연설문 -.”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308-311쪽.

61 위의 글, 307쪽.

62 위의 글, 316쪽.

63 김성철, “김정일시대의 정책전망: 위기 속의 정치체제 변용과 전망,” 17쪽.

- 이 같은 입장의 연구자들은 김정일이 당이 군대로부터 배울 것을 강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름.
  - 위의 김정일 연설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김정일은 ‘사회 정치사업’이 ‘군대 정치사업’을 본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정치사업은 어디까지나 조선로동당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사회의 당일꾼들이 군대의 당일꾼들의 사업방식으로부터 배우라는 것이지 당이 군대로부터 배우라는 의미는 결코 아님.
  - 김정일은 또한 위의 연설에서 “사회주의 위업을 고수하고 완성해나가자면 당을 강화하고 당이 총대를 틀어줘야”<sup>65)</sup>한다고 지적함으로써 ‘당의 영도적 역할’을 분명하게 재확인하였음.
- 1997년 김정일의 총비서직 취임과 1998년 국방위원장직 재취임으로 김정일 시대 북한 정치체제의 틀이 확립됨.
- 김정일은 김일성에 대한 3년상이 끝난 후인 1997년 10월 총비서직에 취임함으로써 실질적인 1인자로서의 그의 지위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였음.
  - 그리고 1998년 9월에는 주식적을 폐지하고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에 추대됨으로써 공식적인 권력승계 작업을 마무리하였음.<sup>66)</sup>
  - ‘김일성헌법’으로 불리는 1998년 개정헌법에 의한 권력개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제102조)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제111조), 내각 총리가 대외적으로 정부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어(제120조) 외형상으로는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임.<sup>67)</sup>

64 한용섭, “북한 권력구조의 동요: 군부와 노동당,” 138쪽.

65 김정일,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 311쪽.

66 공화국 주식적을 폐지함으로써 1992년 헌법에서 국가주석의 다음에 그리고 중앙인민위원회보다 앞에 위치하였던 국방위원회가 최고의 국가기구로 된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67 『로동신문』, 1998년 9월 6일.

-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김정일에게 과중한 업무가 지워지는 것을 피하고 경제사업에 대한 책임을 내각에 지움으로써 경제사업의 실패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차원에서 취해진 것으로써 김정일의 권한 축소와는 무관한 것임.
- 1998년의 헌법개정으로 김정일이 국가기구 내에서 군 관련 기구(국방위원회)의 최고 직책만을 차지함으로써 당과 군이라는 핵심적 권력기관을 통하여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밝힘.
  - 개편된 국가기구 내에서 극심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경제기술관료를 중심으로 내각이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하겠음.
- 1992년 헌법에 이어 1998년 헌법도 제1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가기구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조하고 있음.
  - 헌법 위에 존재하는 조선로동당이 북한 정치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당내에서 군 관련인사들의 의전상 서열이 상승하고 국가기구 내에서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된 것은 조선로동당의 군 중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써 그것은 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 원칙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당과 군대의 일심동체, 혼연일체’를 강화하는 방향에서의 변화임.<sup>68)</sup>
  - 그리고 당내 군 관련 간부들의 주석단 서열 상승은 당내에서 그들이 다른 국가기구나 사회단체 등에 관련되어 있는 간부들보다 더 나은 배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경제 부문에 대한 군사 부문의 상대적 우위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북한은 또한 1992년 헌법에 이어 1998년 헌법에서도 제12조에서 국가는

68 고상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와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9), 18쪽 참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구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간접적으로 재확인하고 있음.<sup>69)</sup>

- 김정일은 1992년 12월에 한 연설을 통해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려면 “당과 인민정권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당을 강화하기 위해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일꾼들이 당의 령도에 충실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김정일은 특히 “원칙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당중앙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엄격한 규율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음.<sup>70)</sup>

○ 군(軍)·정(政) 관계와 관련하여 1998년 개정헌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일 체제에서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방위원회가 정부보다 상위에 위치하여 정부를 지도할 권한을 부여받는 등의 근본적인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임.

- 1992년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간주된 데 비해, 1998년 개정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간주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위상이 높아짐.

- 그런데 1998년의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뿐만 아니라 내각의 위상도 올라갔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함.

- 1992년 헌법에서는 정무원이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만 간주되었으나 1998년 헌법 개정에 의해 내각으로 개편되면서 내각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

69 북한이 1972년 헌법에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 실시를 강조하였으나, 1992년 헌법에서부터 ‘인민민주주의독재’ 강화를 강조한 배경에 대해서는 정성장, “북한의 혁명전략과 우리의 대응” (제9차 세종 국가전략포럼 발표 논문, 2003년 5월 16일), 32-33쪽 참조.

70 김정일, “당, 국가, 경제 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 앞에서 한 연설, 1992년 11월 12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222-223쪽.



- 그리고 1972년 헌법 개정 이후 정무원뿐만 아니라 “국가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간주되었던 중앙인민위원회까지 통틀어 ‘정부’로 호칭하였으나, 1998년의 헌법 개정 이후 내각이 곧 ‘정부’와 동일시됨으로써 내각의 위상이 올라갔음.<sup>71)</sup>
- 1992년 헌법에 의하여 국가기구 내에서 이미 실현된 군·정 분리 및 정부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상대적 우위가 주석직 폐지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은 1998년의 헌법 개정을 통해 북한이 군사국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외부의 평가<sup>72)</sup>를 의식하여 북한의 새로운 국가기구체제는 이집트 대통령이 내왔던 군사총통제나 1970년대까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존재했던 군정(軍政)과는 구별되는 ‘군중시의 국가정치체제’라고 주장하고 있음.
- “국가기구 자체를 군사체제화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체제에서 군사를 우선시하고 군사 분야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 높이도록 권능을 규제한 정치체제”라는 것임.<sup>73)</sup>
- 실제적으로 1998년의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가 1992년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한에 비하여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된 권한은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는 것뿐임.<sup>74)</sup>

71 2000년에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대백과사전』 17권은 ‘정부’에 대해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 정치적 권력기구의 총체인 국가와는 달리 정부는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최고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다. 일반적으로 내각이나 국무원이 정부로 되어 국가의 최고집행권력을 담당실현한다. 우리 나라에서 정부는 내각이다. 내각은 최고주권기관에서 채택된 법령, 정령, 결정 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과 전반적인 국가관리사업을 진행한다.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는 것은 내각총리이다. 나라에 따라 국가수반과 정부수반은 겸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수반인 동시에 정부수반으로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대백과사전』, 17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359쪽.

72 양현수,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 북한의 ‘군사국가화’ 논의 비평 —,” 한국정치학회 편, 김유남 외 공저, 『21세기 남북한과 미국』 (서울: 삼영사, 2001), 49-79쪽 참조.

73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24쪽.

74 1992년 헌법에 의해 국방위원회에게 주어졌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중요 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3.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4.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 따라서 김정일시대 북한의 국가기구가 군사 분야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하였으나 국방위원회가 내각 등 다른 국가기구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기구 전반을 지도하는 것은 여전히 조선로동당이므로 북한의 주장은 나름대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1998년의 헌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당(黨)·정(政) 관계에 근본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음.

- 북한은 1998년 9월에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면서 내각을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 내세웠고, 경제사업에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여 내각이 경제사업 전반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조직·진행하며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주관 하에 풀어가도록 하였음.<sup>75)</sup>

- 김정일은 1999년 1월에 당·정 관계와 관련하여 “새로운 국가기구체계의 요구에 맞게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그리고 “내각과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는 다 당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며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일꾼들은 내각과 위원회, 성의 결정과 지시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것들에 절대복종하는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음.<sup>76)</sup>

- 김정일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내각과 위원회, 성의 결정과 지시에 대한 ‘절대복종’이라는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지시를 내렸는데,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김정일 시대 당·정 관계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함.

- 김정일의 지시는 조선로동당이 핵심적인 것만을 장악하고 부차적인 것은 과감하게 내각 등의 행정경제일꾼에게 이양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75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2000), 64-74쪽.

76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주체88(1999)년 1월 1일),” 461-462쪽 참조.

-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조선로동당 조직과 일꾼들은 정치적 지도와 핵심적 정책 수립에 힘을 집중하고, 실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경제일꾼들이 책임지고 해결하는 역할분담체계가 보다 명확하게 확립되게 되었음.
  - 따라서 김정일의 지시를 당적 지도의 약화와 단순하게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절함.
- 1998년 헌법개정 이전에도 김정일이 사회주의세계시장의 붕괴와 구소련의 해체 등으로 인한 북한의 대내외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당의 과도한 간섭을 제한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김정일은 이미 1992년 11월에 한 연설을 통해 “오늘과 같이 정세가 복잡하고 긴장한 조건에서 당조직들이 당내부사업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지 않고 경제사업에 맡려 들어가면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 역할을 높일 수 없으며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였음.
  - 또한 김정일은 물론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 하여야 하지만, 경제사업은 ‘경제사령부’인 정무원을 강화하여 정무원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풀어나가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그리고 향후 비료, 석탄, 금속 부문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나가있는 당지도소조를 철수시켜 당내부사업을 강화하는데 힘을 집중 하려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음.<sup>77)</sup>
  - 여기서 ‘당내부사업’이란 주로 당사상사업과 관련되는 것임.
- 그런데 김정일은 1992년 11월 연설에서 경제사업에 대해서는 정무원이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보기에 따라서는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관여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구상을 내놓았음.
- 즉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일꾼들로 하여금 지방산업공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 지배인을 맡게 하여 그들이 현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고

77 김정일, “당, 국가, 경제 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208-209쪽.

경제관리방법도 배우게 함으로써 앞으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음.<sup>78)</sup>

- 따라서 ‘경제사령부’인 정무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정무원에 대한 당의 과도한 관여를 줄이려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

○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후인 1994년 10월에 정무원의 역할 제고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음.

- 김정일은 정무원이 “나라의 전반적 경제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조직지휘하는 경제사령부”라고 하면서 “당에서는 정무원이 경제사령부로서 나라의 경제사업을 전적으로 맡아보도록 하기 위하여 정무원 책임제, 정무원 중심제를 내놓고 모든 사업조건을 지어주었”다고 지적하였음.

- 그리고 경제기관들은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정무원에 집중시키고 정무원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그런데 김정일은 정무원이 경제사업에 대해 당 앞에 책임지고 있으며, 경제지도일꾼들은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정무원에 대한 당의 우위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하였음.<sup>79)</sup>

○ 1998년의 헌법 개정은 무엇보다도 지방 수준에서 당·정 관계의 부분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1992년 헌법에 비하여 그 위상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내각이 지방인민위원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권을 갖게 되었으며, 도(적할시)나 시(구역) 또는 군에서 지방행정경제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지방인민위원회로 흡수되었음.

- 그리고 지방인민위원회가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 되어(제139조) 지방행정기관의 위상이 강화되었음.<sup>80)</sup>

78 위의 글, 230쪽.

79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94년 10월 16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436-437쪽.

8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로동신문』, 1998년 9월 6일.

- 또한 당의 책임비서가 인민위원장을 겸임하지 않고, 신임 인민위원장으로서는 대부분 과거의 행정경제위원장이 선출됨으로써 형식상 당·정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음.<sup>81)</sup>
  - 이는 지방 수준에서 행정기관에 대한 당의 과도한 간섭을 줄이고 행정기관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김정일 시대에 군대의 영향력이 당의 영향력을 압도하게 되었다는 식의 주장은 현재 학계에서 서서히 퇴장하고 있는 중이지만, 대신에 “당정군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시스템에 의해 수령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령 개인이 당정군을 직접 직할통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어 김정일 시대 당·군·정 관계에 대한 인식상의 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음.
- 이 같은 논지를 제기한 연구자는 김일성 시대에 “수령이 당의 총비서와 더불어 국가주석이라는 국가기관의 공식직함을 통해 사회에 대한 전일적 지배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되었고, 노동당 역시 중앙인민위원회라는 공식기구를 통해 당의 정권기관에 대한 정치적 지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리고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직과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된 것은 법적 장치의 측면에서 “이제 수령과 당의 국가지배 채널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음.<sup>82)</sup>
  -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은 중앙인민위원회가 북한에서 모든 권력이 김일성, 김정일과 노동당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대외적으로 북한에서도 권력이 분립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만들어놓은 실권 없는 조직이라는 것을 간과하는 것임.
  - 중앙인민위원회는 부주석들의 사무실과 무역회사, 부주석들의 의전 및 외사사업을 보좌하는 대외사업부서 등 소규모의 기구만을 가지고 있었음.

81 최진욱, “개정헌법 이후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책전망,”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 48-56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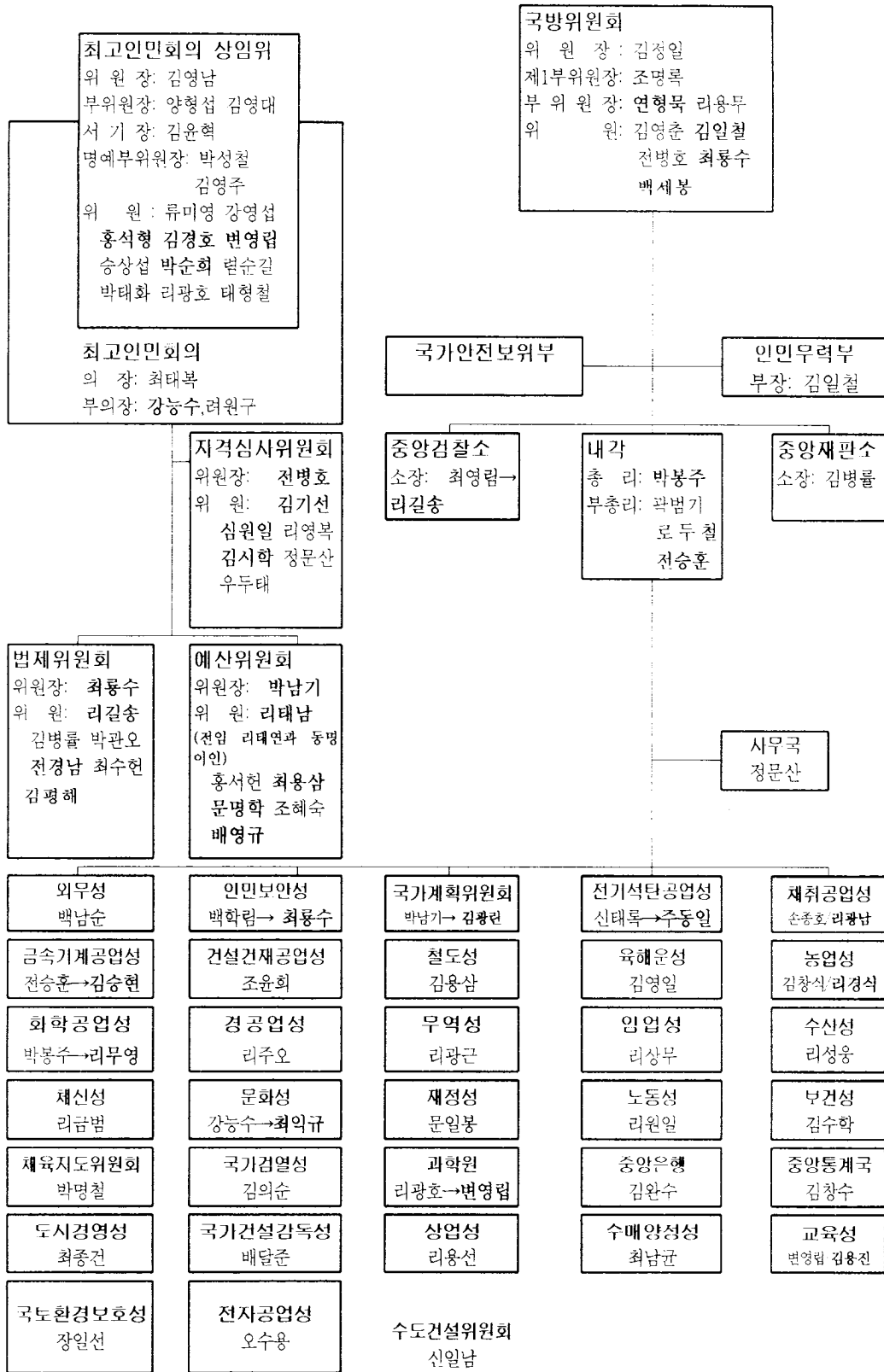
82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 변화,” 352-353쪽.

- 그리고 김일성 생존시에는 금수산의사당(주석부)에 김일성의 책임 서기실, 군사무관실, 외사국장실, 서기실 등이 있었고 주석부가 거의 모든 사업을 주관하였으며, 198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는 김정일 서기실이 이러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sup>83)</sup>
  - 따라서 중앙인민위원회의 폐지로 인해 당의 정부에 대한 영도에서 달라진 것은 없으며,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청사가 아니라 당중앙위원회 청사에서 계속 집무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을 통해 군대와 정부를 지도, 통제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임.
  - 또한 김정일의 1994년 10월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중앙인민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폐기되기 전에도 정무원이 당 앞에 책임지고 경제일꾼들이 당의 의도에 따라 경제과업을 수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과거에 노동당이 “중앙인민위원회라는 공식기구를 통해 당의 정권기관에 대한 정치적 지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도 일치하지 않음.
  - 그리고 김정일이 당·정·군을 직접 ‘직할통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추측도 설득력이 없음.
- 북한은 2003년 9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회의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신임 각료들을 선출하였음.
- 최고인민회의에서 총리 등 일부 인사들의 교체가 이루어졌고, 북한의 당·군·정 관계와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음. (<표 3> 참조)
  - 2002년 10월 방한했던 북한 경제시찰단 18명 중 3명, 즉 박봉주, 김광린, 박남기가 각각 신임 내각총리, 국가계획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이라는 경제요직에 대거 등용된 사실은 주목할만한 점임.<sup>84)</sup>
  - 내각 경제팀의 교체로 인해 향후 북한 내각이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해 보다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83 고영환,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소고, 『북한조사연구』, 제1권 1호 (서울: 통일정책연구소, 1997), 73-74쪽.

84 “北경제요직 3인방은 남한시찰단,” 『연합뉴스』, 2003년 9월 4일.

〈표 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회의(2003.9) 이후 국가기구 체계표



출처: 『2003 북한연감』 (서울: 연합뉴스, 2002), 181쪽; 「연합뉴스」, 2003년 9월 3일.

<주> 신임 인사는 진하게 표시

### 3. 당·군·정 관계 변화의 정책적 함의

- 1972년 헌법부터 1998년 헌법까지 당의 국가기구에 대한 영도 원칙이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확인되어 왔음.
  - 1972년 헌법에서는 ‘프로레타리아 독재’라는 표현을 통해 당의 영도 원칙이 간접적으로 천명되었지만, 1992년 헌법과 1998년 헌법에서는 당의 영도 원칙이 보다 분명하게 천명되었음.
  - 따라서 헌법을 통해서도 군대와 정부에 대한 당의 영도 원칙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는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발견할 수 있음.
- 당·정 관계와 관련해서는 1998년 헌법 개정을 계기로 하여 당은 정치적 지도와 핵심적인 정책 수립에 집중하고 실무적인 문제는 경제일꾼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역할분담체계가 지방 수준에까지 보다 명확하게 확립되었음.
  - 북한에서 여전히 당과 인민정권은 배에서 키를 잡은 사람과 노를 젓는 사람에 비유되고 있음.
  - 즉 키를 바로 잡고 노를 잘 지어야 배를 똑바로 빨리 몰고 갈 수 있는 것처럼, 노동계급의 당이 ‘정책적 지도’를 옳게 하고 사회주의정권이 당의 영도 밑에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사회를 근로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관리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임.<sup>85)</sup>
  - 따라서 1998년의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이 경제와 관련된 노선과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음.
  - 물론 정부가 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거보다 큰 자율성을 갖게 된 것은 경제 개혁 및 개방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할 수 있음.

85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 건설전략』, 63-64쪽.



- 당·정 관계의 부분적 분리는 향후 북한의 대외환경이 개선되면 북한이 개혁과 개방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에서 덩소평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국무원으로부터 지방 각급 정부에 이르기까지,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사업체계를 진정으로 확립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 직권 범위에 속하는 사업은 당중앙과 지방 각급 당위원회가 지시를 내리거나 결정을 짓지 말고, 모두 국무원과 지방 각급 정부가 토의·결정하고 문건을 발표하여야 합니다. 정부사업은 당의 영도 밑에 진행되므로 정부의 사업이 강화되면 당의 영도도 강화되게 됩니다”라고 지적하였음.<sup>86)</sup>
  - 덩소평의 이 같은 주장과 북한의 당·정 관계 분리를 정당화하는 주장 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이 발견됨.
- 당·군 관계에서도 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
  -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올라 갔으나 1998년 헌법에 나타난 국방위원회의 권한은 조선로동당 규약에 나타난 당중앙위원회의 권한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당중앙위원회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 수행을 조직 지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국방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당의 정책 집행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그리고 당중앙위원회가 “혁명적 무력을 조직”하고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국방위원회는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오직 국방위원회 위원장만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86 덩소평, “당 및 국가의 영도제도의 개혁(발췌),” 북경인민출판사 편, 『중국 사회주의 정치개혁의 이론과 실천』 (서울: 삼광출판사, 1990), 117-118쪽 참조.

- 물론 당과 국방위원회 간의 관계를 대립적 또는 경쟁적 관계로만 보는 것은 부적절함.
  - 당중앙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군대 내 정치기관을 통해 군대를 장악하려고 한다면, 국방위원회는 군대 내 지휘계통을 통해 군대를 실무적으로 지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당과 국방위원회의 역할을 상호 보완적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함.
  -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과 국방위원회 구성원이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인적 구성 면에서는 두 조직 간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 다만 북한이 군사보다 정치를 우위에 두고 있고, 당은 군대를 상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가지고 중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국방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군대에 대한 당적 영도의 원칙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북한군이 전쟁도발 등 모험주의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적으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정책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 조선로동당 지도부가 여전히 ‘당과 군대의 일심동체, 혼연일체’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대외환경이 현저하게 개선되지 않는 한 당은 경제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계속 국방력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군·정 관계에서는 1972년부터 1998년까지 매우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1972년 헌법을 통해서도 정부가 국방건설 사업에 제한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지만, 1992년 헌법 개정 이후 군·정 분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졌고 1998년의 헌법 개정을 통해 당 총비서가 국가기구에서 군사부문의 직책만을 맡음에 따라 행정경제 부문에 대한 군사 부문의 상대적 우위가 보다 확고해졌음.

- 그러나 군사 부문과 행정경제 부문 간의 관계는 당과 군대 간의 관계 처럼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도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2002년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실시와 신의주 특구 및 개성 특구 지정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대외안보환경이 현저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김정일의 결단만 있으면 행정경제부문은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 IV. 김정일의 권력 승계 전망

- 현재 김정일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임.
  - 그런데 김일성이 매우 왕성한 활동을 벌이던 1972년 그의 환갑을 전후로 해서 북한에서는 후계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 있음.
  - 당시 김정일과 그의 삼촌 김영주 간의 권력투쟁이 심각하게 진행되었는데, 김일성이 김정일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김영주가 병을 얻어 권력의 장에서 은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황장엽 전 조선로동당 비서의 증언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임.<sup>87)</sup>
  - 김정일은 1972년에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당의 핵심적 책으로 곧 옮겨갈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김정일은 이듬해인 1973년 9월 중앙위원회 비서로 그리고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었음.
  - 따라서 북한이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김정일의 후계 문제를 결정한다면, 김정일이 환갑이 된 2002년경부터 후계자 지명과 관련한 움직임이 구체화 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음.
- 2002년 상반기에는 김정일의 60회 생일(2.16), 김일성의 90회 생일(4.15) 그리고 조선인민군 창건 70주년 기념행사(4.25) 등 중요한 정치행사들이 있었음.<sup>88)</sup>
  - 북한은 김정일의 60회 생일을 계기로 김정일의 권위를 더욱 절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내부적으로 김정일의 후계자 지명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음.

87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167-169.

88 정성장, “2002년 북한정세 및 남북한관계 전망,” 『정세와 정책』, 2002년 1월, 성남: 세종연구소, 9-11쪽 참조.

조선인민군출판사에서 2002년 8월에 발간한 대외비 자료 『존경하는 어머니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충신 중의 충신이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가장 몸 가까이에서 보좌해 드리시며 충성 다해 모셔 가는 존경하는 어머니는 항일전의 그날 아버지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우리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 놓으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와 꼭 같으신 분, 우리 모두가 따라 배워야 할 충신의 위대한 귀감이다”라고 하면서 김정일의 부인 고영희(만50세)에 대한 개인숭배를 조장하고 있음.<sup>89)</sup>

- 이는 고영희의 아들 김정철 또는 김정운을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음.<sup>90)</sup>

○ 조선인민군출판사의 대외비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는 ‘존경하는 어머니’는 김정일의 본처인 김영숙이 아니라 고영희가 분명함.

- 김정일은 1974년경에 아버지(수령 김일성)가 정혜준 배우자인 김영숙과 마지못해 정식으로 결혼하였으나 형식적인 관계만을 유지하였고, 김영숙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설송이라는 딸만 낳았음.<sup>91)</sup>

- 반면 고영희와 정식으로 결혼은 하지 않았으나 그와 살면서 김정철이라는 아들을 낳음.

- 북한 인민들은 김정일의 부인과 자식들이 누구인지 아는 바가 거의 없으므로 김정일이 고영희를 본처로 내세울 수 있을 것임.<sup>92)</sup>

89 “《존경하는 어머니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충신중의 충신이다》,” 120-130쪽 참조.

90 황장엽은 이 자료의 성격에 대해 “김정철이를 후계자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인광, “황장엽 전 노동당 사상·국제 담당 비서 확인 인터뷰,” 『월간조선』, 2003년 3월호, 113쪽.

91 성혜량, 『등나무집』 (서울: 지식나라, 2000), 376, 395, 416-418쪽; 『북한 주요 인물 자료집 2002』 (서울: 통일부, 2002), 134쪽.

92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의 이모인 성혜량은 “가계(수령과 지도자의 직계)는 공민 증도 없다. 그 어떤 법적 수속도 문서도 없는 것이다. 누구를 아내로 인정하는가는 법 위에 군림한 최고 수반 자신의 인정 외에는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성혜량, 『등나무집』, 375, 418쪽.

- 북한이 조선인민군출판사의 대외비 자료에서 고영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존경하는 어머니님’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은 고영희를 본처로 내세우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김정일이 1974년 2월에 당 내에서 김일성의 후계자로 결정된 후 북한 언론이 1970년대 내내 그의 정식 이름 대신 ‘당중앙’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처럼,<sup>93)</sup> 2002년 8월의 조선인민군 문건이 고영희에 대해 정식 이름 대신 ‘존경하는 어머니님’으로 호칭한 데에는 또한 고영희가 ‘재포’(재일교포) 출신이라는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임.
  - 고영희가 ‘재포’라는 사실은 북한에서 지도자(김정일)에게 “백두산 성지에서 태어난 혁명가계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부감”<sup>94)</sup>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김정일이 아직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후계자 지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것은 자신의 후계자를 미리 결정함으로써 김정일의 아들들 간에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벌어지거나 당 간부들이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이나 차남인 김정철에게 줄서기를 함으로써 당 간부들 간에 분열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김정일은 자신에게 충실한 후계자를 미리 지명함으로써 사망 시까지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사망 후에는 후계자에 의해 자신이 격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임.
-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무렵 권력누수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스탈린식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수령’(최고지도자)의 임기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수령이 나이가 들수록 후계문제를 둘러싸고 암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큼.
- 스탈린이 사망 전까지 지속적으로 숙청을 단행했던 것은 자신의 후계자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력누수를 막기 위한 것이었음.

93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501쪽.

94 성혜량, 『똥나무집』, 417쪽.

- 그러나 이미 수령의 후계자가 정해져 있다면, 수령은 임종시까지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됨.
- 김정일의 후계자로는 그 동안 국내에서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과 차남인 김정철이 주로 거론되어 왔음.
  -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김정일이 봉건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대신 다른 인물 가운데 후계자를 찾을 가능성은 희박함.
  - 김정남은 만 32세(1971년생)이고,<sup>95)</sup> 김정철의 나이는 만 22세(1981년생)로 알려지고 있음.<sup>96)</sup>
- 김일성이 1974년에 김정일을 그의 후계자로 결정한 때에는 김정일이 그의 장남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탁월한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였음.
  -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김정남 역시 뛰어난 정치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증언들이 있음.
  - 김정남의 이모인 성혜랑은 국내에서 출판된 『등나무집』이라는 책에서 “정남이는 예민하고 어려서부터 정치적이고 조숙하였다”고 술회하고 있음.<sup>97)</sup>
  - 성혜랑은 또한 김정남이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빠르며, 어머니 성혜림의 예술적인 재능을 이어받아 사람을 잘 웃기는 쾌활한 남자”라고 지적하고 있음.<sup>98)</sup>
- 김정남을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는 ‘북풍사건’의 주인공 윤홍준은 김정남이 후계자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똑똑하다고 평가하면서, 김정일처럼 말을 아주 빠르게 하고 상대방이 말할 틈을 주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음.

95 성혜랑, 『소식을 전합니다』 (서울: 지식나라, 1999), 28쪽.

96 『북한 주요인물 자료집 2002』 (서울: 통일부, 2002), 134쪽.

97 성혜랑, 『등나무집』, 514쪽.

98 우종창, “북풍사건의 주인공 윤홍준 주장: 《나는 일본에서 김정남을 만났다》,” 208-209쪽.

- 그는 또한 김정남의 말하는 스타일과 걸음걸이가 아버지 김정일을 빼다 박았다고 주장하였음.<sup>99)</sup>
  - 이렇게 김정남과 접촉 경험이 있는 인물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그가 김정일의 성격과 자질을 상당한 정도로 이어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김정남은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정치적 감각 그리고 나름대로의 인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모의 문제로 인하여 후계자로 지명되는 데 결정적인 흠을 가지고 있음.
- 김정남의 생모인 성혜림이 김정일과 정식으로 결혼한 부인이 아니며, 1970년부터 김정일과 비밀리에 같이 살기 전에 소설 ‘땅’으로 유명한 월북작가 이기영(전 문예총 위원장, 1984년 사망)의 장남 이평과 결혼<sup>100)</sup>하여 딸 하나까지 낳았던 유부녀였다는 사실은 유교적, 보수적 문화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북한에서 성혜림을 ‘국모’(國母)로 내세우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리고 성혜림이 김정일의 사랑을 많이 받기는 하였으나, 1973년부터 병치료를 위해 모스크바에 자주 체류하면서 김정일의 부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sup>101)</sup> 2002년 5월 모스크바에서 지병으로 사망한 사실<sup>102)</sup>도 성혜림을 국모로 내세우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김정일이 성혜림과의 동거 사실을 인민들에게 숨기기 위해 김정남을 북한의 정식 학교에 보내지 않고 철저하게 고립된 생활을 하게 한 것도 김정남이 북한사회에서 자신의 인맥을 구축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음.
  - 성혜림의 조카 이일남(이한영) 및 언니 성혜랑 등이 남한 또는 외국으로 망명한 사실도 김정남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99 위의 글, 198쪽.

100 “사망설 도는 성혜림은 누구인가,” 「연합뉴스」, 2002년 10월 16일.

101 성혜랑이 모스크바로 떠난 후 김정남을 맡아 키운 것은 성혜림의 어머니 김원주와 언니 성혜랑이었음. 성혜랑, 『동나무집』, 28쪽 참조.

102 “성혜림, 지난 5월 모스크바서 사망,” 「연합뉴스」, 2002년 11월 7일.



○ 현재의 상황에서는 김정일이 북한 유도의 창시자인 고태문의 딸 고영희와 동거하면서 가지게 된 차남 김정철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유력함.

- 비록 고영희가 '재포'(재일교포) 출신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성혜림처럼 '국모'로 내세우기에 큰 결격사유(이혼경력)를 가지고 있지는 않음.

- 김정일이 현재 누구보다 고영희를 사랑하고 있으며, 김정철이 태어나면서 김정일의 김정남에 대한 사랑이 김정철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에 김정철이 후계자로 지명될 될 가능성이 큼.

- 김정남의 이모인 성혜랑은 이미 1989년경에 “정일 비서가 이미 집에서 떠났고 그토록 사랑하던 정남이마저 버리고 마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김정일이 김정남에 대한 '눈물의 애정'을 김정철을 비롯한 새 아이들에게 옮겼다고 지적하고 있음.<sup>103)</sup>

- 황장엽 전 조선로동당 비서는 “후계자는 왕이 사랑하는 여자의 아이가 되는 거니까” “오래전에 떨어져 나간” 성혜림의 아들 김정남이 김정일의 후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북한에 있을 때 계속 얘기했다고 술회하고 있음.<sup>104)</sup>

- 김정철은 스위스 국제학교에서 유학한 후 현재 노동당 선전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sup>105)</sup>

○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김정남은 서장자(庶長子)에, 김정철은 적자에 비유될 수 있음.

- 과거 왕조시대의 역사를 보면 서장자는 적자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사랑을 받으나,<sup>106)</sup> 적자가 태어나면 그 사랑은 옮겨가기 마련임.

103 성혜랑, 『등나무집』, 430, 485쪽.

104 김인광, “황장엽 전 노동당 사상·국제 담당 비서 확인 인터뷰,” 114-115쪽.

105 김인광, “김정일 세습을 최초로 포착했던 정보부 북한국장 출신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분석,” 『월간조선』, 2003년 3월호, 106쪽.

106 성혜랑은 김정남이 어렸을 때 “김정일 비서는 이 세상의 어느 아버지보다도 아들을 사랑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을 저토록 사랑할 수가 있을까 놀라왔다”고 회상하고 있다. 성혜랑, 『등나무집』, 383쪽.

- 김정철이 태어나면서 김정일의 마음이 김정남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으므로 김정남이 1997년부터 후계수업을 받아왔다는 주장<sup>107)</sup>은 김정일의 김정남에 대한 배려를 과장해석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임.
- 대북 정협에 관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2002년 1월 필자에게 김정일의 후계자는 김정철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면서 김정철을 북한에서 ‘총회장’으로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그는 또한 북한의 권력엘리트 중에서 김정남을 지지하는 세력이 15% 정도에 불과하다면 김정철을 지지하는 세력은 약 85% 정도이며 그 세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빠르면 — 2002년을 기준으로 하여 — 3년 후 늦어도 5년 후쯤이면 후계자가 공식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sup>108)</sup>
- 성혜림이 2002년 5월에 사망함에 따라 김정일이 마침내 첫 부인인 성혜림에 대한 부채의식에서 벗어나게 된 점이 동년 8월 조선인민군에서 고영희를 개인숭배하는 문건이 발간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 고영희에 대한 개인숭배를 확산하고 김정철을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한 작업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김일성의 차남 김평일이 김정일의 전제에 의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해외대사직을 전전하는 것처럼, 김정남이 현재 해외를 계속 떠돌아다니는 것은 그가 후계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시사하는 것임.
- 향후 김정일의 아들이 그의 후계자로 지명되고 김정일이 앞으로 10년 이상 생존한다면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현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경제적으로는 김정철이 스위스의 국제학교에 유학한 경험이 있으므로 그가 정치적으로 부상하면 대외 개방정책이 더욱 가속화되고 북한과 유럽연합 간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북한의 친유럽연합적 입장이 김정철의 후계구도와 일정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함.

107 『조선일보』, 2001년 1월 15일.

108 정성장, “김정일의 후계문제에 대한 시론(試論),” 『학인』, 제4호 (서울: 경남대 북한대학원 총학생회, 2002), 90-94쪽 참조.

- 최근에 와서는 김정철의 동생이자 김정일의 3남인 김정운(만 20세)<sup>109)</sup>이 후계자로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음.
  -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김정철이 예술적 재능은 김정일을 닮았으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해 김 총비서가 그에 대해 “그 녀석은 안돼, 여자 같아”라고 얘기했다는 것과 김정운이 김정일을 체형까지 꼭 빼닮았고 김정일도 가장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임.<sup>110)</sup>
  - 일부 언론은 2003년 5월에 입국한 한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하여 북한이 지난 1999년경부터 고영희를 ‘평양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강연회 등을 통해 위대성을 선전하고 있으며, 국가안전보위부가 ‘평양 어머니’를 비난하는 자를 정치범으로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리고 고영희가 자신의 둘째 아들인 김정운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당과 군 고위간부들로 하여금 그를 ‘셋별대장’으로 부르도록 하였다고 보도하였음.<sup>111)</sup>
  - 그러나 아직까지는 김정운이 당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구체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타당성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sup>112)</sup>
- 2004년은 김정일이 북한에서 후계자로 결정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김정일의 후계 문제가 보다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이미 권력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준비 작업이 진행 중임을 시사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북한 지도부 내의 동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요망됨.

109 김정일의 3남 이름이 ‘김정훈’이라는 주장도 있다. 장용철,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 — 북한 권력가의 인맥 —』 (서울: 참세상닷컴, 2003), 15쪽.

110 『조선일보』, 2003년 6월 21일, 23일.

111 『연합뉴스』, 2003년 9월 12일.

112 최근에는 김정운도 김정철과 함께 스위스에서 학교를 다녔으며, 고영희(50)의 여동생 고영숙(45)과 그의 남편 박모씨가 1998년에 스위스 주재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으로 망명하였다는 보도도 나왔음. 『중앙일보』, 2003년 8월 18일.

## V. 맺음말

-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1974년부터 김일성주의화하고 1982년부터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한 주체사상이 김일성 사후 김정일주의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 주체사상이 붉은기사상, 선군정치론 또는 강성대국론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주체사상은 새로운 통치담론의 제시와 기존 이론의 부분적 수정을 통해 여전히 북한의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북한의 통치이념에 있어서 흥미 있는 변화는 혁명주의적 경향이 약화되고, 군사주의적 경향 및 실용주의적(또는 실리주의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점임.
- 따라서 한국정부는 북한의 군사주의적 경향을 약화시키고 실용주의적 경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대북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sup>113)</sup>
- 다수의 연구자들은 김정일 시대 당의 정치적 영도 기능 약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일성 사후 정치국 회의가 소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인 1994년 10월 16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일군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라고 지적하였음.<sup>114)</sup>
- 따라서 김일성 사후 정치국 회의가 소집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북한의 당·군·정 관계 변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북한 문헌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북한의 당·군·정 관계에서 군대와 정부에 대한 당적 영도 원칙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

113 정성장, “북한의 혁명전략과 우리의 대응” 참조.

114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0월 16일),” 437쪽.

- 그러나 과거보다 당과 군이 하나의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하고 당이 군사사업을 다른 어느 사업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발생하였음.
  - 당·정 관계에서는 당이 여전히 큰 틀에서 기본적인 노선과 정책을 수립해서 제시하고 내각이 이를 집행하는 관계를 유지하지만,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는 내각이 책임을 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났음.
  - 정·군 관계에서는 정·군 분리 및 경제행정 부문에 대한 군사 부문의 상대적 우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어 왔음.
  - 따라서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정·군 관계에서의 변화를 실제보다 확대해석하고 낭적 영도의 지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북한정치에서 여전히 당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대북 협상이나 대북전략 수립에 있어서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김정일의 후계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보들을 분석해보면 향후 김정철(또는 김정운)의 후계자 지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들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사료됨.
- 김정철 또는 김정운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고영희의 여맹 위원장 취임, 고영희에 대한 개인숭배의 강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간부들의 세대교체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따라서 북한의 내부 문건 입수 또는 공식 문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 북한 인사들과의 접촉 등을 통해 김정철(또는 김정운)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김정철과 김정운의 인적 사항, 정치적·정책적 성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북한에서의 권력이동은 중요한 정책 변화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북한의 정책 변화를 한국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한다면, 김정일의 권력 승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향을 추적할 필요가 있음.

-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인민무력부장을 비롯한 북한의 많은 고위인사들이 앞 다투어 제주도를 방문하였는데, 이 또한 김정철(또는 김정운)의 부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제주도가 고영희의 부친, 즉 김정철의 외할아버지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북한과 총련에서 제주도를 성역화하려는 움직임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북측 인사들이 현재 제주도에 대해 많은 호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또는 제2차 국방장관회담 등 남북 당국간회담의 장소로 제주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참 고 문 헌

### <1차 자료>

- 강운빈 저, 사회과학출판사 편, 『인간개조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조국출판사, 1989년 재발행.
- 고상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의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9.
- “과학중시사상을 구현하여 강성대국의 앞길을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1999년 1월 16일 사설.
- “과학중시사상을 틀어 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론설),” 『로동신문』, 2000년 7월 4일.
- 김덕유, “붉은기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강행군을 다 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철학연구』, 1997년 제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 김병진, “당의 령도체계확립에서 전환을 가져 온 위대한 선군령도,” 『로동신문』, 2003년 5월 7일.
-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당선전선동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 저작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72년 12월 27일),” 『김일성 저작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 1972년 12월 27일,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수정 1992년 4월 9일),” 『김일성 저작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2000.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돛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당, 국가, 경제 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앞에서 한 연설, 1992년 11월 12일),”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

- 성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0월 16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 - 1996년 12월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의 연설문 -,”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 \_\_\_\_\_,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울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3월 17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_\_\_\_\_,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88(1999)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 『영도체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로동신문』, 1998년 9월 6일.
- 리종태·동태관, “붉은기를 높이 들자,” 『로동신문』, 1995년 8월 28일 정론.
- “모두 나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로동신문』, 1996년 10월 18일 사설.
- 박승덕 저, 사회과학출판사 편, 『사회주의 문화건설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조국, 1989년 재발행.
- “북한의 조선로동당 규약,” 『북한총람 (1993-2002)』, 서울: 북한연구소, 2003.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문화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백산서당, 1989년 재발행.
- \_\_\_\_\_,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백산서당, 1989년 재발행.
- \_\_\_\_\_,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백산서당, 1988년 재발행.
- \_\_\_\_\_,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백산서당, 1989년 재발행.
- \_\_\_\_\_,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태백, 1989년 재발행.
- \_\_\_\_\_,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태백, 1989년 재발행.
- \_\_\_\_\_, 『영도체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지평, 1989년 재발행.



- \_\_\_\_\_, 『영도예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지평, 1989년 재발행.
-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0.
-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로동신문』, 1999년 1월 1일.
- “우리 혁명무력은 총대로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로동신  
문』, 1998년 4월 25일 사설.
-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자,” 『로동신문』,  
1998년 9월 9일 사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경제학 1-4』,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문예학 1-5』,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1998.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법학 1-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1998.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언어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철학 1-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선군혁명령도에 관한 독창적 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로동신문』, 2003년 1월 1일.
- “절세의 위인 위대한 노선,” 『조선중앙방송』, 2001년 2월 18일 정론.
- 조성박, 『세계를 매혹시키는 김정일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1999.
- 『조선대백과사전』, 17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존경하는 어머니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충신중의  
충신이다》 — 강연자료(2002년 8월) 조선인민군 출판사 (대외비  
자료 전문) —,” 『월간조선』, 2003년 3월호.
- 최용덕·김정웅, “우리는 백배로 강해졌다,” 『로동신문』, 1997년 12월 12일 정론.
- 최철남·동태관·전성호,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9년 8월 22일 정론.

## <2차 자료>

- 강신장, “김정일체제의 선군(先軍)정치와 군사,” 전국대학북한학과협의회 편, 『북한정치의 이해』, 서울: 을유문화사, 2001.
- 고영환,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애 관한 소고,” 『북한조사연구』, 제1권 1호, 서울: 통일정책연구소, 1997, 63-80쪽.
- “군부 비중 높은 북한체제,” 『동아일보』, 1999년 10월 18일 사설.
- 권영기, “[국가정보원장 퇴임 후 최초 인터뷰] 이종찬 국회의 부총재: 《북한은 군부통치국가… 지배층에서 투항자 속출》,” 『월간조선』, 1999년 9월호.
- 김경희, “김정일 시대 주체사상의 지속과 변화,” 이대 북한학 협동과정 석사 학위논문, 2003.
- 김근식, “북한 발전전략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195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9.
- \_\_\_\_\_,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6집 2호 (2002 여름).
- 김미영, “인민군 비밀문서 분석: 제2의 김정숙이 될 「존경하는 어머니」은 누구일까?,” 『월간조선』 2003년 3월호.
- 김성철, “김정일시대의 정책전망: 위기 속의 정치체제 변용과 전망,” 『통일경제』, 1997년 9월호.
- 김연철, “군부중심의 위기관리와 모색의 정치: 권력승계와 모색의 정치,” 『통일한국』, 1997년 7월호.
- 김영재, “김정일 지도체제와 권력구조,”  
[http://www.unikorea.go.kr/kr/northkorea/northkorea\\_understand.php](http://www.unikorea.go.kr/kr/northkorea/northkorea_understand.php)  
(검색일: 2003년 9월 5일)
- 김인광, “김정일 세습을 최초로 포착했던 정보부 북한국장 출신 강인덕 진통일부 장관 분석,” 『월간조선』, 2003년 3월호.
- \_\_\_\_\_, “황장엽 전 노동당 사상·국제 담당 비서 확인 인터뷰,” 『월간조선』, 2003년 3월호.
- 김창희, 『북한정치사회의 이해 [제3판]』, 서울: 법문사, 2002.
- 김현식·손광주, 『다큐멘터리 김정일』, 서울: 천지미디어, 1997.
- 통소평, “당 및 국가의 영도제도의 개혁(발취),” 북경인민출판사 편, 『중국 사회주의 정치개혁의 이론과 실천』, 서울: 삼광출판사, 1990.
- 박현옥,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사전략,” 『북한』, 2001년 4월호.
- “방북 언론사장단-김위원장 대화록(2),” 『중앙일보』, 2000년 8월 14일.

- “北경제요직 3인방은 남한시찰단,” 「연합뉴스」, 2003년 9월 4일.
- 『북한문제 이해 1999 - 실태와 변화 가능성 -』, 서울: 통일교육원, 1998.
- 『북한 주요인물 자료집 2002』, 서울: 통일부, 2002.
- 『북한총람 (1993-2002)』, 서울: 북한연구소, 2003.
- “사망설 도는 성혜림은 누구인가,” 「연합뉴스」, 2002년 10월 16일.
- 샤피로, 레오나드. 『전체주의 연구』, 서울: 종로서적, 1983.
- 서재진, “김정일시대 통치이념의 변화: 주체사상에서 강성대국론으로,” 『북한 체제의 현주소』, 학술회의 총서 02-02,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성혜랑, 『소식을 전합니다』, 서울: 지식나라, 1999.
- \_\_\_\_\_, 『등나무집』, 서울: 지식나라, 2000.
- “성혜림, 지난 5월 모스크바서 사망,” 「연합뉴스」, 2002년 11월 7일.
- 『세계일보』, 1997년 2월 15일.
- 양현수,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 북한의 ‘군사국가화’ 논의 비평 -,” 한국정치학회 편, 김유남 외 공저, 『21세기 남북한과 미국』, 서울: 삼영사, 2001.
- 『연합뉴스』, 2001년 12월 31일; 2002년 12월 28일; 2003년 4월 8일, 9월 3일, 9월 9일, 9월 12일.
- 『연합연감 1998』, 서울: 연합통신, 1998.
- 우종창, “북풍사건의 주인공 윤홍준 주장: 《나는 일본에서 김정남을 만났다》,” 『월간조선』, 2001년 6월호.
- 유석렬, 『북한의 체제위기와 한반도통일』, 서울: 박영사, 1997.
- 유영구, “북한의 정치·군사관계의 변천과 군내의 정치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 『계간 전략연구』, 제4권 제3호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7).
- 이금순,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연구총서 99-02,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 김정일 시대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 \_\_\_\_\_,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 서울: 한울, 2003.
- 이상민,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조선노동당의 위상,” 이상민 외, 『21세기의 남북한 정치 - 새로운 남북관계와 통일한국의 미래 -』,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0.
- \_\_\_\_\_,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장용철,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 — 북한 권력가의 인맥 —』, 서울: 참세상닷컴, 2003.
- 정성장, “김정일체제의 지도이념과 성격 연구: ‘붉은기사상’과 북한체제의 변용을

-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39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9.
- \_\_\_\_\_,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와 성격,”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1999.
- \_\_\_\_\_, “주체사상의 기원과 형성 및 발전 과정,”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1집 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0.
- \_\_\_\_\_, “남북정상회담 후속대화의 평가,” 『북한연구학회보』, 제4권 제2호, 서울: 북한연구학회, 2000.
- \_\_\_\_\_, “김정일 시대 북한의 ‘선군정치’와 당·군 관계,” 『국가전략』, 제7권 3호, 성남: 세종연구소, 2001.
- \_\_\_\_\_, “김정일의 ‘선군정치’: 논리와 정책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제4권 2호, 서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한울, 2001.
- \_\_\_\_\_, “2002년 북한정세 및 남북한관계 전망,” 『정세와 정책』, 2002년 1월, 성남: 세종연구소.
- \_\_\_\_\_, “김정일의 후계문제에 대한 시론(試論),” 『학인』, 제4호, 서울: 경남대 북한대학원 총학생회, 2002.
- \_\_\_\_\_, “북한의 혁명전략과 우리의 대응,” 제9차 세종 국가전략포럼 발표논문, 2003년 5월 16일.
- 『조선일보』, 2001년 1월 15일; 2003년 6월 21일, 23일.
- 『중앙일보』, 1997년 2월 14일; 2003년 4월 4일, 8월 18일.
- 최진욱, “개정헌법 이후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책전망,”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
- \_\_\_\_\_, “북한 선군정치의 정치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제4권 2호, 서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한울, 2001.
- 한용섭, “북한 권력구조의 동요: 군부와 노동당,” 『계간 사상』, 1997년 가을호.
- 한호석, “‘선군혁명령도’와 ‘제2의 천리마 대진군’: 1990년대 말 북(조선) 정세 인식의 초점,” <http://www.onekorea.org/research/t26.html>
- 현성일, “북한노동당의 조직구조와 사회통제체계에 관한 연구 —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중심으로 —,” 한국외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 \_\_\_\_\_, “경남대 북한대학원 초청 특강에서의 증언,” 1999년 4월 17일.
- \_\_\_\_\_,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서울: 월간조선사, 2001.
- 『2003 북한연감』, 서울: 연합뉴스, 2002.

- Carrère d'Encausse, Hélène., "L'URSS ou le totalitarisme exemplaire," in Madeleine Grawitz and Jean Leca (eds.), *Traité de science politique 2*, Paris: P.U.F., 1985.
- Cheong, Seong Chang. *Idéologie et système en Corée du Nord: De KIM Il-Sông à KIM Chông-Il*, Paris: L'Harmattan, 1997.
- Schurman, Franz,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3.

